

# 이 시장, 광주공항 무안 이전 약속 지킬까?

### “2021년 이전” vs “재검토” 충돌 속 고민 커져 협약이행·시민요구 동시 충족 묘안 나올지 주목

이용섭 광주시장의 광주공항을 무안군 제공항으로 이전키로 한 약속을 지키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시장은 두 공항을 내년까지 통합하기로 한 전남도와의 협약과 광주시민 80% 의견을 토대로 이전을 재검토하라는 정책 권고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에 처해 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12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하는 계획을 유보하라'는 내용의 정책권고문을 이 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민권익위는 5개 항의 권고에서 2021년 이전계획을 유보하고 민간공항 이전시

기는 군공항 이전부지에 대해 전남도와 합의 이후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군공항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간 소통을 강화하고,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할 법적·제도적 개선책 마련, 민간공항 이전시 통합공항 명칭에 '광주' 포함, 시·도·의회·주민대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민간·군공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회' 구성 등 제안도 권고문에 담겼다.  
광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한 달 안에 실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시장은 진퇴양난이다. 광역·기초단체 3자간 공식 협약을 백지화하자니 시·도 상생 분위기나 행정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것이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시민 80%의 의사를 거스르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시장은 그동안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결단까지 시단은 그리 길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 안팎에서는 자칫 상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해안을 기대한다. 시·도간 협약과 광주 시민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한 절충안이 없지는 않다는 견해도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민간공항 이전 협약과 광주 시민의 '군공항과 연계한 민간공항 이전' 요구는 상충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며 “민간공항을 이전하고 전남도가 군공항 이전에 더 적극 나서기로 하는 형태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논의의 결림돌이 되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 자치단체 관계자는 “성급하게 이전 대상지를 결정하기보다 시·도가 함께 정부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특별법 제정, 4,500억원 정도인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증액 등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여건이 선행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황애란 기자



상품 구매하는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오후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방문해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 행안부 '바다 품은 자전거길 40선' 전남 18개 최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바다 품은 자전거길 40선'에 전국 최다인 18개 노선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숨겨진 자전거길을 발굴해 자전거인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추천받아 자전거길 40선을 선정·발표했다.

선정 결과 바다를 맞대고 이어진 자전거 도로를 따라 독특한 풍광과 향토색을 느낄 수 있는 전국 23개 지자체의 40개 노선이 선정됐으며, 전남도는 전국 최다인 9개 시·군 18개 노선이 포함됐다.  
전남지역 선정지는여수 금오도를 비롯해 고흥 거금도부터 소록도 구간, 신안 임자도, 완도 생일도, 강진만 생태자전거길

등이다.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 나눔 누리집(www.bike.go.kr)과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 게시돼 언제든지 내려받을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접근성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해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 도, 관광지 주변 음식점 22일까지 '방역 특별점검'

전남도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함께 비위생적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여수아쿠아플라

넷 등 도내 주요 관광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2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도 및 시·군 직원 124명과 함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이 동원되며, 시·군 교차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전자출입명부 작성, 주기적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조치 및 고발할 계획이

다.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우선 현지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필요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콜라텍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있다. 또 도내 일반·휴게 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경우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길용현 기자

## '증인 불출석' 그린카진흥원 추가 행감 불발

#### 시의회, 과태료 처분 요구·행정사무조사 검토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추가 행정사무 감사가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그린카진흥원에 대한 행감을 열었다. 산건위가 지난 5일 진흥원에 대한 행감에서 이날 증인 출석을 요구한 배정찬 전 원장,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박광태 대표·박광식 부사장이 불출석, 행감을 30분 만에 종료했다. 이날 행감에는 배 전 원장의 후임인 현대자동차 출신의 김덕모 원장만 나왔다. 배 전 원장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박 대표와 박 부사장은 출석의무가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정환 위원장은 감사장에서 “그린카진흥원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위

해 전일 배정찬 원장, 박광태 대표, 박광식 부사장을 조례에 따라 증인출석을 요청했으나 불출석했다”며 “감사의 의미가 없어 감사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은 483억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이 투입된 지역 상생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150만 광주 시민의 뜻과 이를 대변하는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어서 유감이다”며 “그린카진흥원과 GGM이 광주정신에 걸맞게 역할을 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사직한 배 전 원장이 업무 관련자로서 출석의무가 있다고 보고 광주시에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요구할 계

획이다. 박 대표와 박 부사장에 대해서는 'GGM이 광주시의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임직원은 출석의무가 없다'는 법률자문이 나왔지만, 업무 관련자인 만큼 불출석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정구를 검토 중이다.  
의회는 추가로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감사를 다시 할지,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 그린카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갈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그린카진흥원은 운영 전반에 여러 문제가 제기돼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배 전 원장이 물러나 시작했다. 그린카진흥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GGM의 박 대표와 박 부사장이 지역 상생정신과 역행하는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진흥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황애란 기자

## “광주시, 그린뉴딜 예산 90% 민간공원”

#### 정순애 시의원 “13개 추진사업 중 5개만 신규”

광주형 그린뉴딜 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정순애 시의원(민주당·서구2)은 12일 광주시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로운 변화 없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만으로는 2045년 탄소중립도시를 만드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시 환경생태국은 2021년 그린뉴딜과 관련해 13개 사업, 1조1,985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비 민간자본 1조807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1,178억원으로 전체 10%에 불과하다.  
광주형 그린뉴딜과 관련해 2021년 환경생태국에서 추진하는 13개 사업 중 5개만 신규사업이다. ‘인공지능·인간중심 에코순환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환경부 공모 진행 중이며,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부서별 기후위기대응 실천목표 설정 및 이행도 평가는 신규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총 사업비 100억원 전액 국비로 진행되



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또한 그린뉴딜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정책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반해 광주시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만 유지하려는 것은 광주시가 그린뉴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10년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하는데, 광주시가 제시한 2045년은 너무 늦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국제비즈니스호텔**  
새롭게 다시 만나는 W-STAY 국제비즈니스호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 단체예약 환영 ◀

국제비즈니스호텔 W 돈텔마마 7080나이트 클럽  
문의 : 062) 673-0700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8 (주월동 1287-2)